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

📧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통상) 브루킹스연구소, 美 2025년 관세 인상 조치 분석 2

🌐 경제통상 동향

- (관세) 트럼프 행정부, 15% 관세 및 232조·301조 활용 관세 전략 재확인 4
- (통상) WTO 각료회의(MC14) 개시...WTO개혁·전자상거래 등 핵심 쟁점 논의 5
- (무역협정) EU 의회, 지난해 체결된 미-EU 무역협정 비준 6
- (미중관계) 트럼프, 5월 방중...중동 전쟁으로 연기됐던 美·中 정상회담 재개 7

🏛️ 의회법안 동향

- OPT, 관세, 인공지능, 제조업 등 법안 발의 4건 8

🗨️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3.27(금)	• 3월 소비자 심리(Consumer sentiment (final))
3.31(화)	• 3월 소비자 신뢰지수(Consumer confidence)
4.1(수)	• 2월 미국 소매 판매(지연)(U.S. retail sales (delayed report))
4.2(목)	• 2월 미국 무역적자(U.S. trade deficit)

(통상) 브리킹스 연구소, 美 2025년 관세 인상 조치 분석

1. 개요

□ 브루킹스 연구소, '25년 美 관세조치 구조 및 단기 경제영향 분석

- '25년 관세 조치의 구조·가격·교역·후생효과를 실증 및 모형 분석을 통해 점검
 - 브루킹스 경제활동보고서*는 '25년 무역·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·산업별 무역모형을 통해 관세정책의 단기 영향 분석
- * Tariffs in 2025: Short-Run Impacts on the U.S. Economy
- '25년 美 관세체제는 고율·복합 구조로 확대되었으나, 실제 경제적 영향은 관세 인상 폭에 비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
 - 美 평균 적용관세는 '24년 2.4%에서 '25년 12월 9.6%로 상승했으며, '24년 수입가중 기준으로는 12.5%에 달해 약 80년 내 최고 수준 기록
 - 다만 전체 수입의 57%가 여전히 무관세로 유입되고 중국 외 주요국의 보복 관세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경제적 영향은 관세 인상 폭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분석

2. 주요 내용

□ 美 관세조치는 주요 교역국 전반을 포괄하는 고율·복합 구조로 전개

- '25년 관세조치는 대중국 중심에서 주요 교역상대국 전반으로 확대
 - '17년 1.4%, '19년 12월 3.0%였던 美 평균 적용관세는 '25년 12월 9.6%까지 상승하며, 적용 범위와 인상 폭이 모두 확대
 - (중국) 중국산 수입품 평균 적용관세는 '25년 12월 기준 31.7%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, 사실상 대부분 품목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
 - (캐나다·멕시코) USMCA 적격품 무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평균 적용관세는 3.9%에 그쳤으나, 비적격품에는 평균 25.3%의 높은 관세 부과
 - (기타) 동아시아·태평양(9.2%), 유럽·중앙아시아(9.1%), 중남미(7.1%), 남아시아(22.0%) 등 전반적인 관세 상승이 확인, 미얀마·라오스·몰도바·레소토·세르비아·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중국보다 높은 평균관세 부담

□ 품목별로는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 중심의 관세 인상 폭 확대

-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인상 폭을 보인 반면, 일부 전략 예외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
 - 의류·섬유·신발은 평균 28.1%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, 금속 24.2%, 운송장비 12.8%, 가구·기타 제조 10.9%, 농업 7.7%, 기계·전자 7.5%, 화학·플라스틱 6.4% 등 산업 전반으로 관세 인상 영향 확산
 - 반면 광물·에너지 부문은 사실상 무관세가 유지되었으며, 일부 컴퓨터·통신 장비도 예외가 적용되어, 전략산업만을 선별한 관세 체계보다 전통 제조업·소비재·안보 관련 품목이 혼재된 구조로 평가

□ 관세 부담은 외국 수출업체보다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더 크게 전가

- 관세의 약 90%가 美 수입업자 부담 가격에 전가되며,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
 - 동 보고서는 관세의 가격 전가율을 80~100%(기준 추정치 약 90%)로 제시하며, 관세 부담이 외국 수출업체보다 수입업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분석
 - 관세정책은 세수 확대와 일부 산업 보호 효과에도 불구하고, 수입비용 및 소비자 부담을 높였으며, 특히 저가 수입 소비재 중심으로 부담 확대 가능성 제기

□ 대중국 수입 축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, 제3국으로의 수입 전환도 병행

- 대중국 수입 축소 효과는 확인되나, 수입 감소분 상당 부분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평가
 -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'17년 23%에서 '25년 7%로 하락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액도 감소(456억 달러→194억 달러)하는 등 디커플링 효과 확인
 - 다만 중국산 수입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생산보다 제3국 수입으로 대체되고, 동아시아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'17년 12월 18.5%에서 '25년 12월 34.1%로 상승해 프렌드쇼어링 및 리쇼어링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브루킹스(3.25), 로이터(3.26) 및 미 현지 언론 종합

(관세) 트럼프 행정부, 15% 관세 및 232조·301조 활용 관세 전략 재확인

- 피터 나바로 백악관 보좌관,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 대체 방안 재확인
 -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·제조업 담당 수석 보좌관은 폴리티코 주최 ‘경제 논의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%로의 인상 절차가 진행 중*이라고 언급(3.25)
 - * 무역법 122조(국제수지 문제 대응)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%의 구체적 시행일은 언급하지 않음
 - 또한, IEEPA 관세 판결*에도 232조 관세 대상 품목 확대 및 전 세계 대상 추가 조사를 통해 IEEPA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
 - * 미 대법원, IEEPA(국제긴급경제권한법)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결, IEEPA 관세 위법 판결('25.2월)
 - 이와 더불어 USTR이 301조 조사*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
 - * USTR은 3월 ① 16개 주요 교역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, ②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, 그리어는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또는 교역국과의 협상 가능성 표명
 -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(국제수지 문제), 232조(국가안보) 및 무역확장법 301조(자국 산업 피해) 병행을 통해 IEEPA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전략 추진 중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▪ 자료원	인사이드(3.25), 폴리티코(3.25)

(통상) WTO 각료회의(MC14) 개시...WTO개혁·전자상거래 등 핵심 쟁점 논의

- (개요) WTO 제14차 각료회의(MC14), 제도 개혁 및 전자상거래 관세유예 등 논의
 -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MC14에서 회원국들은 WTO 개혁, 전자상거래 관세유예(moratorium), 투자원활화 협정 등 주요 통상 의제를 집중 논의 예정
 - * 카메룬 야운데, 3.26(목)~3.29(일) (약 4일간 진행)
 - 미국은 최근 USTR WTO 개혁 보고서를 통해 최혜국대우(MFN) 원칙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, EU 등은 개정 논의에는 열려 있으나 신중한 접근 강조
- (상세) 개혁 로드맵·분쟁해결·전자상거래 등 다수 의제 병행 논의
 - (WTO 개혁) 회원국들은 WTO 개혁을 위한 작업계획(work plan) 합의 도출을 추진 중이나, 미국은 구속력 있는 계획보다는 논의 자체에 중점을 두는 입장
 - (분쟁해결제도) 개혁은 주요 의제이나, 미국의 상소기구(Appellate Body) 위원 선임 반대로 실질 진전은 제한적
 - (전자상거래) 분야에서는 디지털 관세 유예의 영구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, 미국은 상설화를 추진하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반대 입장
 - (기타) 투자원활화협정(IFDA)의 WTO 협정 편입 문제는 인도의 반대로 합의 도출 불확실. 그외 어업 보조금, 농업 협상 재개, 최빈국(LDC) 지원 문제 등도 논의 예정
- (반응)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 난항 전망...WTO 기능 회복은 미지수
 - 다수 회원국은 WTO 개혁 로드맵 도출을 핵심 성과로 기대하는 반면, 미국은 실질적 합의 도출에 소극적 입장
 - 현지 언론은 전자상거래 관세유예, 분쟁해결제도, 투자협정 등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 이해가 상충해 포괄적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인사이드(3.26)

(무역협정) EU 의회, 지난해 체결된 미-EU 무역협정 비준

- (개요) EU 의회, 미-EU 무역협정 비준 완료

- EU 의회, 미국과 작년 체결한 무역협정에 보완 장치를 추가해 비준 완료*(3.26)

- * EU 의회는 그린란드 관련 우려,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로 두 차례 의회 비준 연기

- (상세) EU 의회 안전장치 추가, EU 회원국·EU 행정부와 추가 협상 과정 필요

- EU 측은 주요 쟁점인 협정 불균형성·미국의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해소하기 위해,
▲ 미국이 무역협정을 이행한 경우에만 협정 발효, ▲ 2028년 자동 종료 조항 (sunset clause), ▲ 필요시 협정 중단 가능 조항(suspension clause) 추가

- EU는 미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하고 식품농산물 시장 접근성 확대할 예정
이며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%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%로 유지

- EU 의회는 이번 승인 후 4월 EU 회원국·EU 행정부와 추가 협상이 예정이며,
이후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이 협정 승인 여부 최종 결정

- (반응) 전문가들은 비준 순항 전망, 비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존재

- 무역협정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EU 의회 비준이 완료된 만큼 이후 절차는
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

- 블룸버그에 따르면, 독일은 무역 갈등 심화 시, 미국에 정치적 보복 장치를 검토하고
있으며, 미국 기술기업 겨냥·인공지능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일 것으로 예상

- EU 주재 미국 대사는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 “대서양 양안 시민들을 위해 올바른
결정을 내렸다”라고 언급하고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

-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김기범

- 자료원 | 블룸버그(3.26), 로이터(3.26), NYT(3.26)

(미중관계) 트럼프, 5월 방중...중동 전쟁으로 연기됐던 美·中 정상회담 재개

- (개요) 백악관, 트럼프-시진핑 정상회담 5월 14~15일 베이징 개최
 - 레빗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중동 전쟁 기간 중 “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체류 필요성을 이해했다”고 밝히며, 양국 정상이 일정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
 -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올해 말 워싱턴으로 초청해 답방을 주최할 예정이며, 구체적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
- (상세) 美·中,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 간 소통 채널 유지 필요성 부각
 -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 이후 첫 대면 회담으로,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및 유가 급등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·외교 아젠다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그리어 USTR 대표는 301조 조사 착수를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신규 관세 부과 근거 마련을 추진 중으로, 향후 美·中 통상 마찰 재점화 가능성 내재
 - 양국은 무역 긴장 완화, 대만 문제, 지역 안보 등 광범위한 현안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, 정상급 소통 채널 유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, 이번 일정 재조정이 중국 측 역할·입장과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James Lee
▪ 자료원	폴리티코(3.26), 블룸버그(3.26)

미국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OPT (3.19)	H.R.8013 (하) (3.19)	Sam Liccardo (민)	<p>〈미국 혁신 인재 유치법(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F-1 신분을 유지한 채 OPT를 허용하고, F-1 졸업생에게 최대 12개월의 졸업 후 OPT 취업 허가 STEM 전공 졸업생에게는 추가 24개월(총 36개월)의 STEM OPT 연장 현행 제도를 법으로 확정
관세 (3.19)	H.R.8025 (하) (3.19)	Lloyd Smucker (공)	<p>〈미국의 스트리밍 및 혁신 보호법(Protecting American Streaming and Innovation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STR에게 캐나다의 스트리밍법 이행이 미국 통상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효 후 30일 이내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유사한 스트리밍 법제를 도입한 국가에도 301조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
인공지능 (3.20)	H.R.8031 (하) (3.20)	Donald Beyer (민)	<p>〈미국인 AI 규제 자기 결정권 보장법(GUARDRAILS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트럼프 대통령의 AI 국가정책 행정명령(「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」)을 폐지하고, 각 주가 급변하는 AI 기술에 대응하는 상식적인 안전장치와 규제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
제조업 (3.24)	H.R.7342 (하) (‘26.2.11)	Jeff Hurd (공)	<p>〈미국 제조 일자리법(Made in America Jobs Act of 2026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다시 미국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. 주요 대상 분야는 제조업과 고객 서비스업

* 미국 동부 시간 3월 26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u>Republicans Push White House to Declare National Emergency to Pay TSA Agents</u> (공화당 의원 “교통안전청 급여 지급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해야 해”)</p> <p>교통안전청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봄방학 등 휴가시즌을 앞두고 공항 내 대기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자,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이 급여 지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</p>
The Washington Post	<p><u>Kennedy Center begins layoffs, rocking institution ahead of two-year closure</u> (2년 간 폐쇄 앞두고...케네디센터 정리 하고 시작돼)</p> <p>리노베이션을 위해 2년 간 폐쇄를 앞둔 케네디센터는 오늘부터 정리해고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. 개발, 광고, 마케팅 등의 부서에서 해고가 이루어졌으며, 두자리수 수준의 직원이 해고돼</p>
The New York Times	<p><u>Trump Administration Begins Investigations Into Three Medical Schools</u> (트럼프 행정부, 의대 입학정책 조사 개시)</p> <p>트럼프 행정부는 스탠퍼드대, 오하이오주립대, UC 샌디에이고 의대에 입학정책 관련 수사 개시를 알리며 4.24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</p>
CNN	<p><u>Trump casts doubt on prospect of an Iran deal</u> (트럼프,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의문 제기해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에서 트럼프를 설득해 전쟁을 중단할 책임이 있고 타격해야 할 추가 목표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.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 재개를 원한다고 말했으나, 이란 언론에서는 이란이 워싱턴의 협상 의지에 대해 “완전한 의심”을 갖고 있다고 보도해</p>
USA Today	<p><u>Trump says Iran gifted 'big boats of oil' amid US talks</u> (트럼프, 이란이 대형 유조선 해협 통과 “선물 해”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공식 협상 중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대형 유조선 1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혀. 트럼프는 동 조치에 대해 “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”라고 언급해</p>

* 미국 동부 시간 3월 26일 16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6-09	美, 과잉공급·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6.3월
US26-08	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	2026.3월
US26-07	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	2026.3월
US26-06	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	2026.2월
US26-05	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	2026.2월
US26-04	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·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	2026.2월
US26-03	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6-02	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	2026.1월
US26-01	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5-51	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50	美 2026 국방수권법(NDAA)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	2025.12월
US25-49	미·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(USCC)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8	워싱턴 국제무역협회 'Trade & Tech Summit'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7	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	2025.12월
US25-46	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	2025.12월
US25-45	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	2025.1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 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6 (2026.2.6.)		
코인사-25 (2026.1.24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shim.nature@kotra.or.kr	